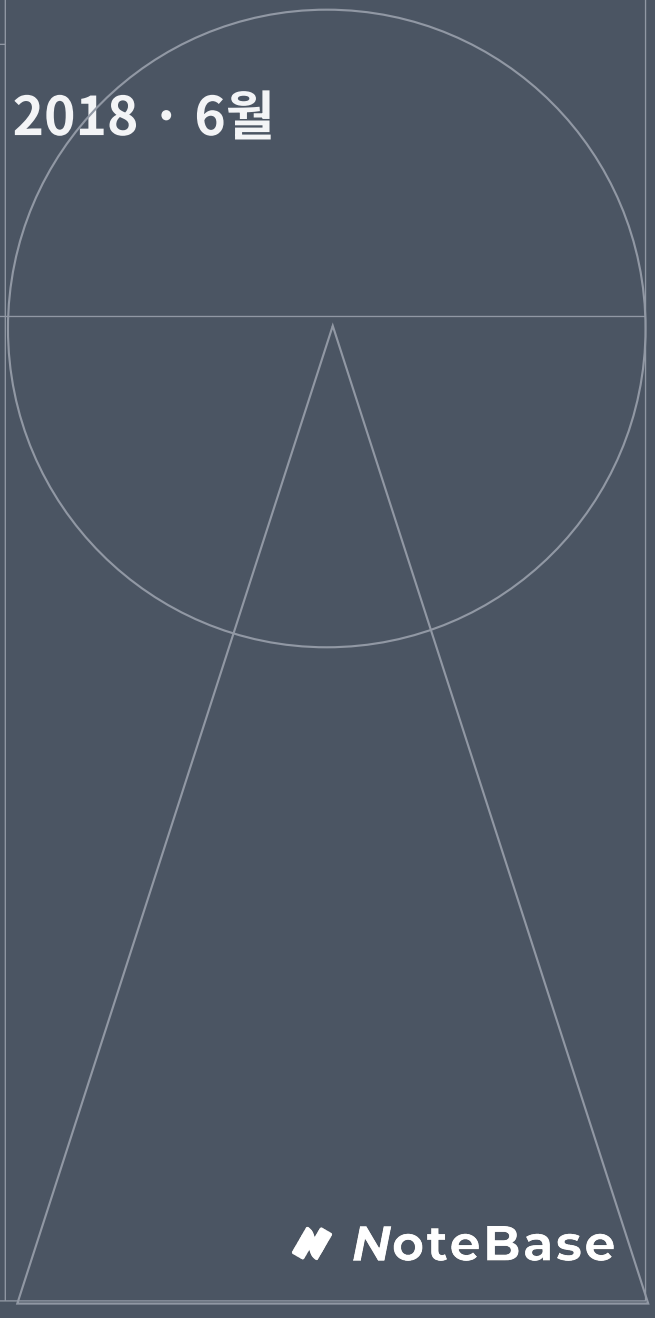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8 · 6월

문 1.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보기>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기도 한다.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가)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① (가)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② (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③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영국과 일본은 (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맡는 (가)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없으며, 탄핵에 따른 파면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국가 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이고,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를 이끌며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지위이다. (가)는 대통령 한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제이다. (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군주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의원내각제이다.

① X: 대통령제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는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O: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된 정당성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재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불신임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끝낼 수 없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③ X: 의원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을 이끌므로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을 통해 내각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④ X: 정부 형태의 연결이 반대이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원수인 군주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분리된 **의원내각제인 (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는 대통령제인 (가)를 채택하고 있다.

NoteBase

문 2. <보기 1>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가)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나)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기 2>

ㄱ. (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다.

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ㄷ. (나)는 (가)와 달리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ㄹ. (가), (나)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근로 3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이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산업화로 심화된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여 발전한 권리이므로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가)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인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이다. (나)는 헌법 제30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으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ㄱ. O: 근로 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용자에 비해 약한 지위를 보완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게 한다.

ㄴ. O: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한다. (나)는 범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구하도록 보장한다.

ㄷ. O: 사회권인 (가)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비해 청구권인 (나)는 국가에 구조를 요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도모하므로 **수단적·절차적 성격**을 가진다.

ㄹ. X: 두 권리가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되었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대 시민 혁명으로 주로 확립된 것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이다. 사회권인 (가)는 산업화 과정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가), (나)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목적	한계
㈎	청소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큼

①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가)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 중시, (나)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나)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나)는 노인에게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의 경험과 내면세계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일기·편지·자유로운 대화 기록 등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 결론, 즉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므로 양적 연구이다. (나)는 노인에게 봉사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 하므로 질적 연구이다.

① X: (가)는 **방법론적 일원론**,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일원론은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원론은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자연 현상과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X: 두 연구 방법의 목적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가)는 봉사 활동과 인성 사이의 관계처럼 **변인 간 관계와 일반적 법칙**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관점에서 그 활동의 의미와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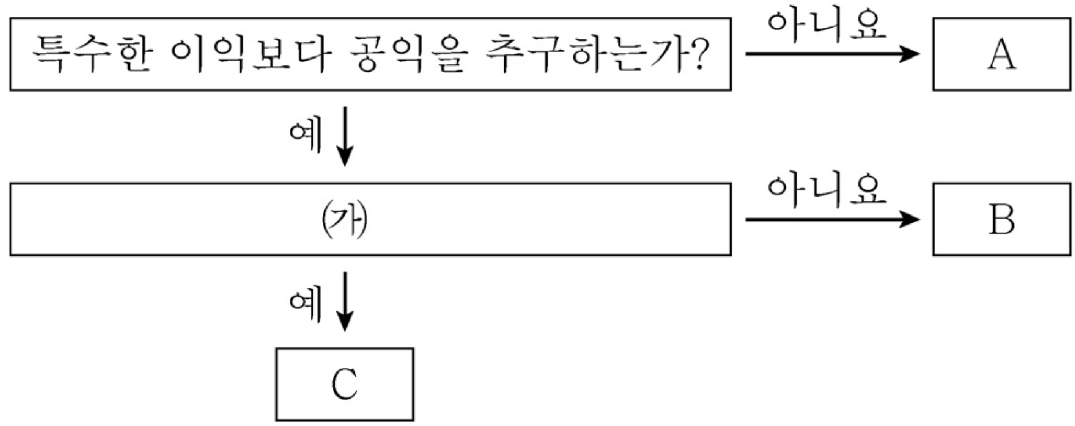
③ X: (가)의 양적 연구는 관찰 가능한 자료를 측정·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연구이므로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아니다. ㉠에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의미나 동기를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들어갈 수 있다.

④ O: (나)의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행위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정형화된 수치 자료뿐 아니라 일기·편지·자유로운 대화 기록과 같은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이런 자료는 노인이 봉사 활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4.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시민 단체이다.

② (가)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질문이면, '예'로 이어지는 C는 **정당**이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으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가?'에 '아니요'로 이어지는 A는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려는 집단이다. 반면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B와 C에 해당하며, 둘의 구체적인 위치는 (가)의 질문에 따라 결정된다.

① X: A는 시민 단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특정 구성원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므로 첫 질문에서 '예'로 분류된다.

② X: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이익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A에 해당한다. B와 C인 정당과 시민 단체에는 모두 이 사례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질문으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③ O: (가)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라면, '예'로 이어지는 C는 정당이고 '아니요'로 이어지는 B는 시민 단체이다. 정당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내어 정권 획득을 추구하고, 정책과 활동의 성과에 대해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또한 정부와 의회에서 활동하는 소속 인사들을 통해 정책 추진과 입법 활동을 연결·조정하므로,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X: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이는 B와 C 중 하나에 해당한다. A인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NoteBase

문 5.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분	청구 요건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보기 2>

ㄱ. (가)는 헌법소원심판, (나)는 위헌법률심판, (다)는 정당해산심판이다.

ㄴ. (나)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다)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다)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의 상고심 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가)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나)는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다. (다)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해산심판이다.

ㄴ.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주체는 법원이라는 점을 구별한다.

ㄷ. X: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상급심을 담당하는 관계가 아니다.

ㄹ. X: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는 설명은 청구 주체와 절차가 모두 잘못되었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①이다.

NoteBase

문 6.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는 5급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일부 6급 계장도 팀장에 합류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청의 조직은 과거 3국 17실 78담당에서 3본부 24팀 16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여섯 명의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던 계장 직급이 폐지되어 72명의 6급 계장이 팀원으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보기 2>
ㄱ.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ㄴ. 위계는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ㄷ.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ㄹ.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계장이라는 중간 결재 단계를 없애고 직급이 다른 공무원도 팀장을 맡게 한 것은 **수평적·분권적 팀제**의 특징이다. 팀제는 과업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사례는 기존의 계층적 조직을 팀 중심으로 바꾼 것으로, 전통적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탈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을 보여 준다.

ㄱ. O: 팀제는 상층부에 집중된 업무 결정 권한을 개별 팀에 나누어 주고, 팀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조직 운영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의 수직적 지휘·결재 체계에 비해 **의사 결정 권한이 분산되는 분권화**가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ㄴ. O: 결재 권한을 가진 계장 직급을 폐지하여 중간 결재 단계를 줄였고, 일부 6급 공무원도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을 맡았다. 이는 직급에 따른 수직적 위계가 약해지고 조직 구조가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ㄷ. O: 팀제는 고정된 직위별 업무 분담보다 **해결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조직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례의 조직 개편은 정해진 업무를 반복하는 관료제적 운영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ㄹ. X: 팀제는 중간 결재 단계를 줄이고 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의사 결정과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유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직되기 쉽다는 비판은 엄격한 위계와 규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료제에 더 적합하다.

옳은 추론인 ㄱ, ㄴ, ㄷ을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등 보상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	업무의 중요성은 현 기득권층의 판단이고 불평등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① (가)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가)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 정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차등 보상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이고, (나)는 불평등이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며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갈등론이다.

① O: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이해한다.

② X: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설명이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집단이 소유하지 못한 집단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본다. (가)의 기능론은 능력과 역할 수행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조한다.

③ X: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가)의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중요한 직업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나)의 갈등론은 직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본다.

④ X: 사회 불평등을 사회 유지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차등 보상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충실히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의 갈등론은 불평등을 지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보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8.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단계	인구 모형
(가)	감산소사형
초기 산업 사회	다산감사형
전통사회	다산다사형
(나)	소산소사형

<보기 2>

ㄱ. (가)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 1960년대는 (나)에 해당한다.

ㄷ.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형 단계에서 제일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의 감산소사형은 사망률이 낮은 상태에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후기 산업 사회**의 인구 모형이다.
소산소사형에서는 **낮은 출생률과 수명 연장**으로 노인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표에서 (가)는 감산소사형이다. 사망률은 이미 낮아졌고 출생률도 감소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이른 소산소사형의 (나)는 고도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ㄴ. X: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다산감사형의 초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출생률이 높은 가운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낮아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소산소사형인 (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ㄷ. O: 소산소사형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 출생아가 적어 유소년층의 비중이 작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져 노년층이 늘어나므로 <보기 1>에 제시된 단계 중 **노인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옳은 보기는 ㄱ, ㄷ이므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보기 1>

(단위 : %)

질문	갑(甲)국	을(乙)국
하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50	㉠
중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70	40
상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80	80

<보기 2>

ㄱ.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ㄴ. 갑(甲)국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ㄹ.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두 나라의 상층 비율은 모두 20%이지만, **전체 인구수가 제시되지 않아** 상층 인구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층별 인구수는 비율뿐 아니라 각 나라의 전체 인구수에도 달려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계층이 상층·중층·하층으로만 나뉘므로 세 계층의 비율 합은 100%이다. 표의 '어떤 계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을 100%에서 빼면 그 계층 자체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ㄱ. O: 을국에서 상층을 제외한 비율이 80%이므로 상층은 100% − 80% = 20%이다. 중층을 제외한 비율이 40%이므로 중층은 100% − 40% = 60%이다. 따라서 하층은 100% − 20% − 60% = 20%이고, **하층을 제외한 비율**인 ㉠은 100% − 20% = 80%이다.

ㄴ. O: 갑국의 하층은 100% − 50% = 50%, 중층은 100% − 70% = 30%, 상층은 100% − 80% = 20%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는 전체 인구수가 공통이므로 **비율이 가장 큰 하층의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O: 을국의 상층·중층·하층 비율은 각각 20%·60%·20%이다. 상층과 하층에 비해 **중층의 비중이 큰** 계층 구조이므로 다이아몬드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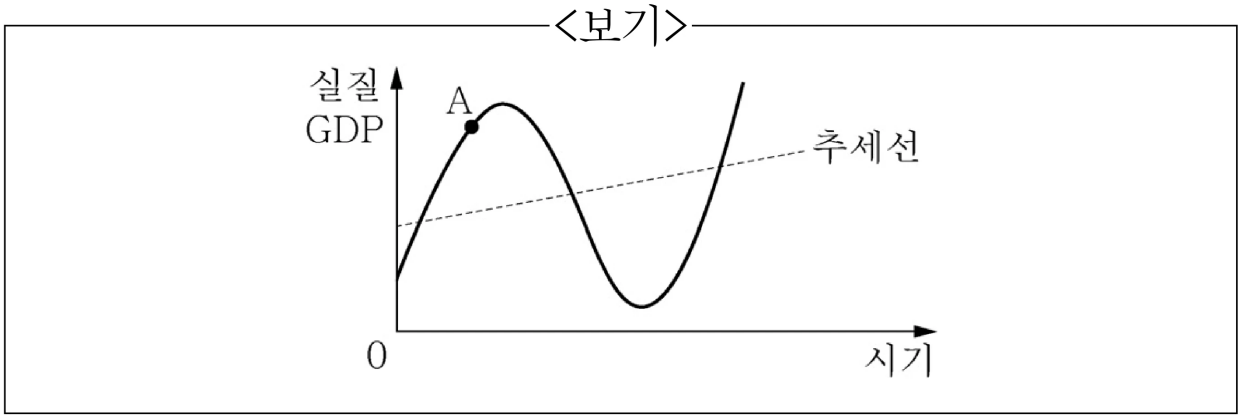
ㄹ. X: 갑국과 을국의 상층 비율은 모두 20%이다. 그러나 상층 인구수는 각 나라 전체 인구의 20%이므로, **전체 인구수가 같아야** 상층 인구수도 같다. 표에는 두 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층 비율이 같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상층 인구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세율 인하

② 정부지출 증가

③ 재할인율 인상

④ 국공채 매입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시기는 실질 GDP가 추세선을 웃돌며 상승하는 국면이므로,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 대출과 통화량의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래프의 세로축은 실질 GDP, 가로축은 시기이다. A는 실질 GDP 곡선이 추세선 위에 있고 계속 상승하는 지점이다. 이때는 총수요를 더 늘리기보다 소비와 투자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는 긴축 정책이 요구된다.

① X: 세율을 낮추면 가계가 세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 이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므로 A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경기 과열을 억제하려면 **세율 인상**이 적합하다.

② X: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정부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A시기에는 반대로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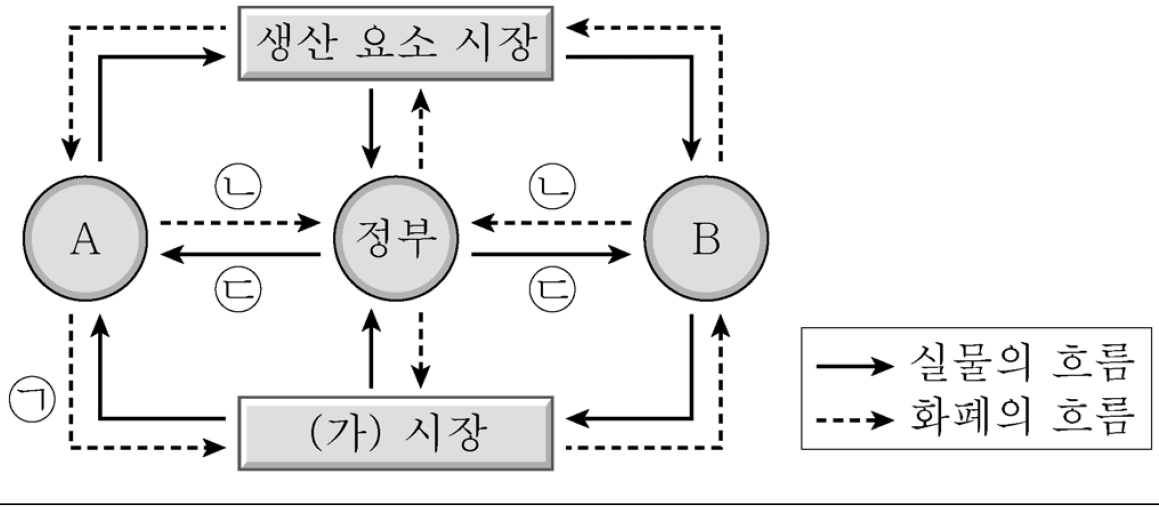
③ O: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어음을 재할인해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이를 높이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커져 대출과 통화량의 확대가 억제된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므로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④ X: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에 지급되어 통화량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된다. 이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 A시기에는 반대로 **국공채를 매각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것이 적합하다.

NoteBase

문 11.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③ B는 (가)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흑자 재정 정책은 조세 수입보다 정부 지출을 적게 하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줄인다. 이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면 가계인 A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실선은 실물, 점선은 화폐의 흐름이다. A는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자본·토지 등을 공급하므로 가계이고, B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므로 기업이다. (가) 시장에서는 B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A가 이를 구입하므로, (가)는 생산물 시장이다.

① X: ㉠은 가계 A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지급되는 화폐이므로 **소비 지출**이다. 임금·이자·지대는 가계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A로 향하는 점선에 해당한다.

② X: ㉡은 가계와 기업이 정부에 내는 **조세**이다. 세율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불황에는 가계 소득과 기업 이윤이 줄어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므로, 조세 수입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크기가 커진다'를 '크기가 작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기업 B는 생산물 시장인 (가) 시장의 공급자이지만,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가계 A이다.

④ O: 흑자 재정 정책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 지출보다 많도록 하는 긴축 재정 정책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면 민간의 소비·투자와 정부의 구매를 포함한 **총수요가 감소**한다. 그 결과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가계 A가 받는 임금 등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NoteBase

문 12.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여질 때 결국 일탈 행동이 된다.
(나)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습득할 경우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다)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①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가)는 (나), (다)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③ (나)는 (가), (다)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다)는 (가), (나)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는 어떤 행위가 일탈이 되는지를 **사회의 낙인과 반응**으로 설명하는 낙인 이론이다. (나)는 일탈 행동을 배우는 과정에, (다)는 사회 규범의 혼란에 주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낙인 이론이다. 어떤 행위에 일탈이라는 규정이 붙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일탈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일탈을 정당화하는 가치와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다)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못한 혼란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① X: (가)는 지배적 가치와 규범의 사회화 실패보다 **일탈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초점을 둔다. 사회 규범이 개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데 주목하는 것은 기능론적 설명이며, (다)는 사회 변동에 따른 규범의 혼란을 일탈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② O: (가)는 행위 자체에 일탈이라는 속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제시문에서 특정 행위를 일탈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타인의 규정과 사회적 반응**이 일탈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반면 (나)는 일탈 행동의 학습을, (다)는 규범의 혼란을 통해 일탈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다.

③ X: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사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설명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해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학습하는 데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다.

④ X: (다)는 산업화와 같은 사회 전체의 변화와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중시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개인 간 상호작용과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가), 일탈자와의 교류 및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나)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정○○ 7.9%	B당 신○○ 39.5%	C당 이○○ 12.3%	D당 김○○ [당선] 40.3%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최○○ [당선] 45.4%	A당 박○○ 15.0%	B당 안○○ [당선] 20.2%	B당 표○○ 12.1%	C당 조○○ 7.3%

①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②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③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선거구에서는 **정당별 총 득표율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최○○(45.4%)와 그다음인 안○○(20.2%)가 당선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1선거구에서는 D당 김○○이 40.3%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지 않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과반수에 미달해도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② X: 가선거구에서는 두 명을 선출하며, 후보자 개인의 득표율이 45.4%인 최○○과 20.2%인 안○○이 득표순으로 당선되었다. A당 소속이라도 개인 득표율이 15.0%인 박○○은 낙선하였다. 따라서 당선자는 **정당별 총 득표율이 아니라 후보자별 득표순**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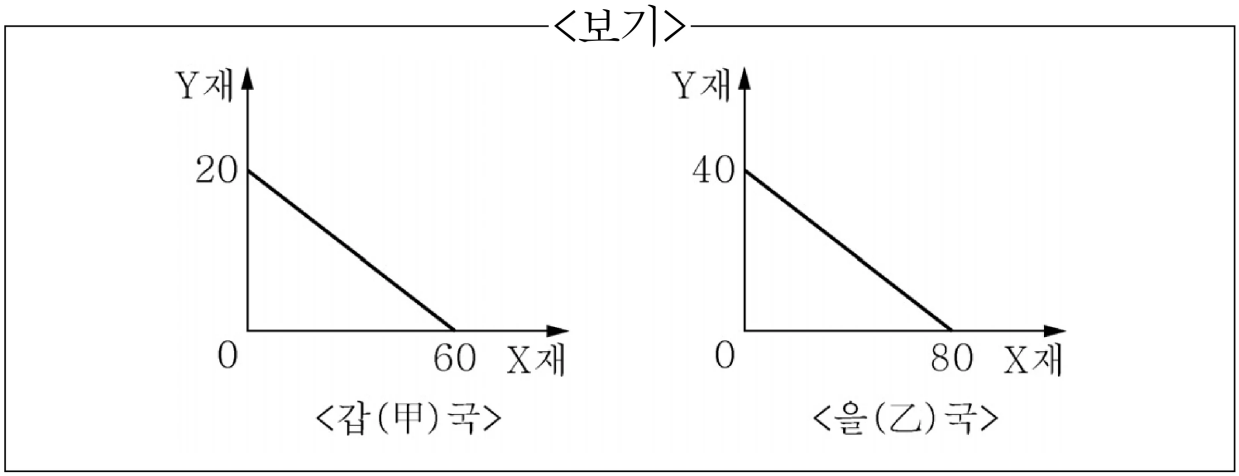
③ O: 제1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였다. 낙선한 후보자에게 준 표는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표가 되므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어긋날 수 있다**. 자료에서도 D당 후보자의 득표율은 40.3%이지만 이 선거구의 유일한 의석은 D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표는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④ O: 가선거구에서는 최○○이 45.4%, 안○○이 20.2%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지만 두 후보자는 각각 한 의석을 차지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수의 표가 동일한 한 의석으로 연결**되면, 득표가 적은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의석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선거구 안에서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보기>



①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②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④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frac{1}{3}$개, 을국이 Y재 $\frac{1}{2}$개이다. 양국 모두 교역 이익을 얻으려면 X재 1개와 교환하는 Y재의 수량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래프의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의 생산량이다. 갑국은 X재만 생산하면 60개, Y재만 생산하면 20개를 생산하며, 을국은 각각 80개와 40개를 생산한다. 생산가능 곡선이 직선이므로 한 재화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 즉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① X: 갑국은 X재 60개를 생산하는 대신 Y재 20개를 포기하므로, X재 50개 생산 시 Y재의 최대 생산량은 $20 - \frac{20}{60} \cdot 50 = \frac{10}{3}$개이다. 따라서 X재 50개와 Y재 15개를 함께 생산하는 조합은 **생산가능 곡선 바깥**에 있어 생산할 수 없다.

② O: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frac{20}{60} = \frac{1}{3}$개, 을국이 Y재 $\frac{40}{80} = \frac{1}{2}$개이다. 갑국은 X재 1개를 수출하고 Y재를 1/3개보다 많이 받아야 직접 생산할 때보다 유리하고, 을국은 X재 1개를 수입하면서 Y재를 1/2개보다 적게 주어야 유리하다. 따라서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X재 1개의 교환비율은 Y재 1/3개 초과, 1/2개 미만에서 결정된다.

③ X: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X재 $\frac{60}{20} = 3$개, 을국이 X재 $\frac{80}{40} = 2$개이다. 따라서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④ X: 비교 우위는 다른 나라보다 해당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은 경우를 뜻한다. X재는 갑국의 기회비용이 더 낮고, Y재는 을국의 기회비용이 더 낮다. 따라서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면 갑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하며, 을국은 Y재를 수출하고 X재를 수입한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보기>

(단위 : %)

	갑(甲)국			을(乙)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5	10	15	3	−2	4
물가상승률	−10	10	20	2.5	−4	6

※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실질GDP) × 100

①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였다.

②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

③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보다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④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6년 갑국은 실질GDP와 물가가 전년보다 각각 10% 상승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총수요 증가**는 생산과 물가를 함께 높이므로, 이 변화는 총수요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GDP 증가율이고, 이 문제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다. 증가율이 양수이면 해당 수준이 전년보다 높아졌고, 음수이면 낮아졌다는 뜻이다.

① X: 2015년 갑국의 경제성장률은 -5%이다. 따라서 실질GDP는 2014년보다 **5% 감소**하였으며, 증가한 것이 아니다.

② X: 2015년 을국의 실질GDP는 3% 증가했고 물가는 2.5% 상승했다. 명목GDP에는 생산량 변화와 가격 변화가 모두 반영되므로, 명목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보다 높다**. 실질GDP가 전년의 1.03배, GDP디플레이터가 전년의 1.025배이므로 명목GDP는 전년의 $1.03 \times 1.025 = 1.05575$배이다. 즉 명목GDP 증가율은 5.575%로, 실질GDP 증가율 3%보다 높다.

③ O: 2016년 갑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10%로, 실질GDP와 물가가 전년보다 함께 상승하였다. 총수요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요이다.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일정할 때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실질GDP와 물가가 함께 상승**한다. 따라서 갑국의 변화는 총수요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④ X: 2017년 갑국은 실질GDP가 15%, 물가가 20% 상승했고, 을국은 실질GDP가 4%, 물가가 6% 상승했다. 두 나라 모두 생산과 물가가 함께 상승한 것이다. 단기 총공급이 일정할 때 **총수요 감소는 실질GDP와 물가를 함께 낮추므로**, 제시된 변화와 맞지 않는다. 두 나라의 변화는 총수요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①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만 17세인 B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이며, 당사자가 합의해도 하루 1시간만 연장할 수 있다.
9시부터 20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B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X: 근로계약을 반드시 1년 이상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사실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③ X: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B가 시급 7,000원에 합의했더라도, 문제에서 제시한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O: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만 연장할 수 있다. 만 17세인 B에게도 이 제한이 적용된다. 9시부터 20시까지는 11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11 − 1 = 10시간이다. 이는 **합의가 있어도 가능한 하루 8시간의 한도**를 넘으므로, A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 12월 국제 연합 (가)이/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가) 15개 이사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14 대 1로 부결되었다.

①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어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점에서 (가)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선지별 해설

(가)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보기의 결의안이 14 대 1로 부결된 것은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이사국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다.

① X: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총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O: 국제 연합 헌장 제24조 제1항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책임에 따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나 국제 분쟁에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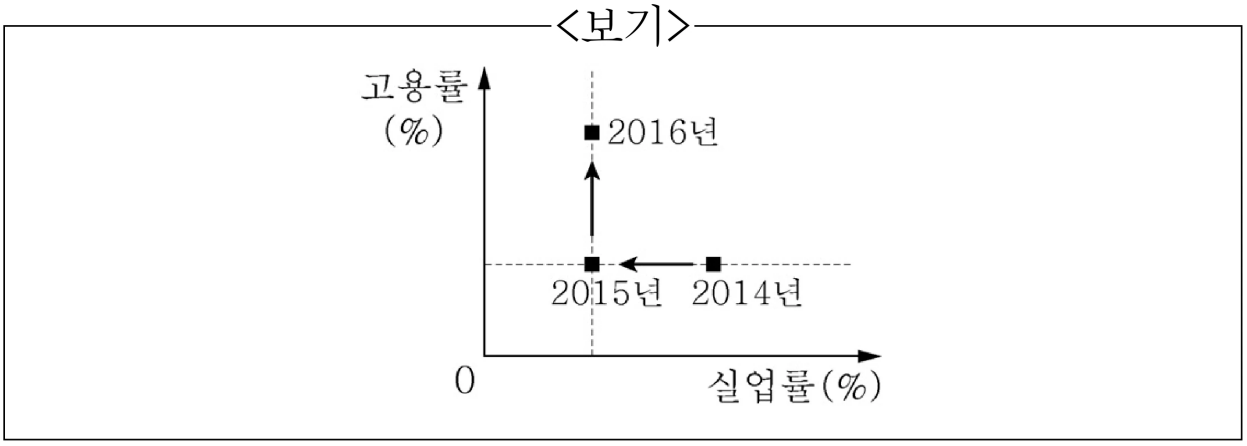
③ X: 안전 보장 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국제 연합 헌장 제42조에 따라 경제 제재 등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제로 불충분한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X: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가 간 법적 분쟁을 재판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연합 헌장 제92조는 국제 사법 재판소를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규정한다.

NoteBase

문 18.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보기>



①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②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③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④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실업률은 같고 고용률은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므로 취업자 수가 늘었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같게 유지되려면 실업자 수도 함께 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실업률, 세로축은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며,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나머지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① X: 2014년과 2015년의 점은 같은 높이에 있으므로 고용률이 같다. 고용률의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므로 취업자 수도 **두 해가 같다**. 따라서 2015년 취업자 수가 더 적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② X: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가면서 고용률은 같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취업자 수가 같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실업자 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으므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조건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③ O: 2015년과 2016년의 점은 같은 세로 점선 위에 있으므로 실업률이 같고, 2016년의 점이 더 높으므로 고용률은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므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실업률이 같으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으므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이때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게 유지되므로 **실업자 수도 증가한다**.

④ X: 2015년과 2016년은 실업률이 같지만, 이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같다는 뜻이다. **실업률이 같다고 경제활동인구 수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두 해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같은데 취업자 수가 늘었으므로,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보다 많다.

NoteBase

문 19.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자동차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출세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 중소 기업의 부장이신 아버지 을(乙)의 뜻을 거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丙)과 결혼을 강행하며 항상 자신보다 병(丙)을 감싸고 위한다.

<보기 2>
ㄱ. 갑(甲)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ㄴ. 갑(甲)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다.
ㄷ. 갑(甲)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ㄹ. 갑(甲)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갑이 다니는 회사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배우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며, 회사원과 남편은 후천적으로 얻는 **성취지위**이다. 수소자동차 개발로 받은 칭송은 역할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역할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고, 역할행동은 그 기대에 따라 개인이 실제로 수행한 행동이다. 갑이 수소자동차를 개발한 것은 실제 업무 수행이므로, 이에 대한 칭송은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역할에 대한 보상'을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고쳐야 한다.

ㄴ. O: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사회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 등을 익히게 하는 기관이다. **회사는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며, 갑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므로 그 구성원이다.

ㄷ. O: 성취지위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얻는 지위이다. 갑의 **회사원과 남편이라는 지위**는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태어나면서 부여되는 아들이라는 귀속지위와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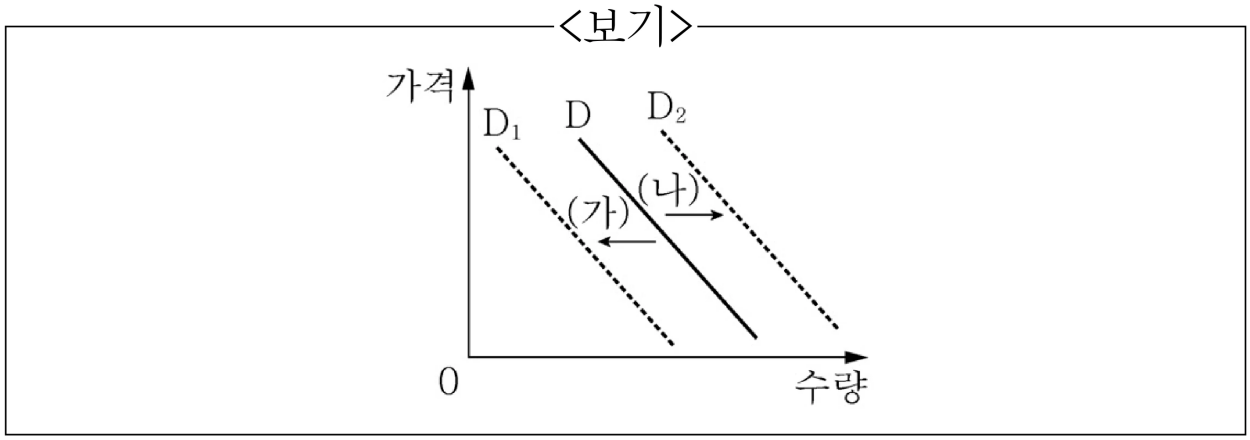
ㄹ. X: 역할 갈등은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여 심리적 긴장을 겪는 것이다. 갑에게 아들은 귀속지위이고 남편은 성취지위이지만, 사례에는 두 지위의 역할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갑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병과의 결혼을 강행하고 병을 감싸고 있다. **아버지와 뜻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역할 갈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에서 (가)와 (나)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가)와 (나)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① (가): 소득 감소, (나): 대체재 가격 상승

② (가): 기호 감소, (나): 대체재 가격 하락

③ (가): 인구 감소, (나): 보완재 가격 상승

④ (가): 가격 하락, (나): 보완재 가격 하락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으로 수요 감소, (나)는 오른쪽 이동으로 수요 증가이다. X재가 **정상재일 때 소득 감소**는 수요를 줄이고, **대체재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X재를 찾게 하므로 수요를 늘린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그래프의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다. 같은 가격에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사려는 수량이 줄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늘어난다. 이는 X재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수요 곡선 전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동'이다.

(가) 수요 감소: 실선 수요 곡선에서 왼쪽 점선으로 이동했다. X재를 정상재로 보는 전제에서, 소득이 줄면 같은 가격에서도 X재를 덜 사려 하므로 수요가 감소한다. X재에 대한 기호 감소나 인구 감소도 수요 감소 요인이다. 반면 X재 자체의 가격 하락은 **기존 수요 곡선 위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의 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나) 수요 증가: 실선 수요 곡선에서 오른쪽 점선으로 이동했다. 대체재는 X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대신 X재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 X재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재 가격 하락은 반대로 X재 수요를 감소시킨다. X재와 함께 사용하는 보완재는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도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의 소득 감소와 (나)의 대체재 가격 상승을 연결한 ①이 해당한다. ②와 ③의 (나)는 수요 감소 요인이며, ④의 (가)는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이 아니다.

NoteBase